

도, 미래 신산업 유치로 경제 도약 박차

3월 말 기준 민선 8기 기간 중 188건 14조8143억원 투자유치로 사상 최대 성과

전북특별자치도가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며 미래 신산업 중심의 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전북자치도는 첨단 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며 산업 생태계를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으며, 그 결과 투자 유치 실적도 획기적으로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어 주목된다.

전북자치도 김인태 기업유치지원실장은 1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선 8기 들어 도에서 발로 뛰며 노력한 기업유치 지원 실적을 발표했다.

▲투자 유치 성과 : 사상 최대 실적 기록

전북특별자치도는 2025년 3월 말 기준으로 민선 8기 기간 중 총 188건의 투자협약(MOU)을 체결하며 14조 8,143억 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내는 사상 초유의 실적을 만들어 냈다. 이는 연평균 5조 3,870억 원에 달하는 규모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투자 유치 금액(약 3조 51억 원)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특히, 전북자치도가 중점적으로 유치한 미래 첨단산업 기업은 전체 투자 기업 수의 27.1%(51개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투자한 금액은 10조 7,773억원으로 전체 투자액의 72.7%를 차지해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북특별자치도 김인태 기업유치지원실장이 1일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도는 올해에도 더욱 신성장 산업군 핵심기업을 중점 유치하여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올해 1분기에도 14건(투자규모 2,316억 원, 고용규모 438명)의 투자협약이 체결되었으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전북이 미래 첨단산업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다.

▲신산업 육성과 지역별 특화 전략

전북자치도는 바이오, 모빌리티, 탄소융합, 방위산업,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집중적으로 유치하며, 시·군별 특화 전략을 통해 기존 산업과 신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적 접근을 통해 전북도는 지역별 산업 특성을 살리면서도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단지 조성 및 환경 개선으로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

전북자치도는 기업이 선호하는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노후 산업단지를 대대적으로 정비하며 산업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먼저, 완주 수소 특화단지는 2030년까지 50만 평 규모로 조성, 대한민국 수소산업 허브로 육성한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과 관련, 2028년까지 53만 평 규모의 식품산업단지를 조성한다.

또한, 20년 지난 100만평 산단을 대상으로 경쟁력 있는 첨단산업단지로 전환을 도모한다.

이어, 75개 노후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5년간(2026~2030) 경쟁력 강화 및 근로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청년들이 선호하는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산단 내 문화·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근로자 복지를 강화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에 선정된 5개 시군의 6개 산단에 388억 원이 투입되는 산단 환경 조성 사업이 올해에 시행되어 청년 근로자 복지 환경이 개선될 예정이다.

올해에도 완주군에서는 산업부 선도 문화 산단 사업에 선정되어 677억 원이 투입되어 진행되며, 전주시도 산업단지 환경 조성 사업에 35억 원이 투입되어 청년층이 선호하는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한 산업단지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센티브 확대 및 맞춤형 기업 지원

기업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전북자치도는 수도권 대비 법인세·소득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기회 발전 특구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차 지정(88만 평)에 이어 올해 37만 평을 추가 지정하여 총 125만 평 규모의 기회 발전 특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투자보조금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이고, 다자녀 가구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에는 고용보조금(월 150만 원, 최대 6개월 지원)을 지원하는 등 맞춤형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유치기업 전담관리제'를 적극 시행해 투자 이행 동향과 투자과정 단계 중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등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으로 있어 기업하기 좋은 전북, 글로벌 경제 중심지로 도약하는 전북을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로 인해 앞으로 더욱 많은 성과 창출이 기대된다.

전북특별자치도 김인태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바이오, 친환경 기술 등 첨단산업 투자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전북이 미래 신산업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전북특별자치도와 기업이 함께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특별자문위 설치 조례 전부개정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동화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 8)은 1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과 함께 특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중복 규정 삭제 및 자구수정 등을 통해 조문을 정비하였고, △장기 재직휴가 확대 △학습휴가 사용 제한 요건 완화 △지연자 공무원의 특별휴가 신설 등을 규정했다.

지역과 함께 특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과 함께 특별자문위원회'라는 위원회의 명칭을 '지역과 함께 자문위원회'로 수정하여 특별적 지위보다는 일반적 지위를 띠는 자문위원회로의 전환을 모색했다.

도, 3년 연속 '한우 씨수소' 배출

전북특별자치도가 한우 개량 분야에서 3년 연속 국가단위 후보씨소수를 배출하며 축산 경쟁력을 재입증했다.

전북자치도 축산연구소는 지난 21일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열린 '2025년도 상반기 가축개량협의회 실무위원회'에서 후보씨수소 1두(KPN 1921)가 최종 선발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발은 전국에서 접수된 460두를 대상으로 유전능력을 평가한 결과로, 전북자치도 축산연구소가 배출한 KPN 1921을 포함해 총 36두가 후보씨소수로 선정됐다.

선발된 KPN 1921은 12개월령 체중이 평균보다 101.91kg 더 무겁고, 근내지방도도 0.73점 더 높아, 우수한 성장성과 육질을 동시에 갖춘 개체로 평가받았다.



김영태 남원시의장 산불진화대원 격려

남원시의회 김영태 의장은 지난날 31일, 현장에서 활동 중인 남원시 진화대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긴급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진화대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한 것으로, 김 의장은 "산불 진화에 헌신하는 여러분의 노력이 우리 지역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진화대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격려했다.

또한, 진화대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향후 더 나은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의회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주군의회 임시회 폐회

무주군의회(의장 오광석)가 지난날 28일부터 이날 1일까지 5일간 진행한 제315회 임시회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지난 3월 28일에는 제1차 상임위원회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31일에는 상임위 질의답변을 통해 심의·의결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또한, 4월 1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을 최종 의결하며 제315회 임시회를 마무리 지었다.



더민주전북혁신회의 소속 회원들이 1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尹 파면이 국민의 명령”

더민주전북혁신회의, 현재에 파면 촉구

더민주전북혁신회의(공동상임대표 김용만) 소속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수봉·강태창 의원을 포함한 도내 더민주전북혁신회의 회원 20여명이 4월 1일 오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파면이 국민의 명령이라며 조속한 결정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방용승 더민주전북혁신회의 상임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발생한 산불 피해로 희생된 분들을 애도하고, 전북 민주화 운동에 큰 기여를 하신 이석영(전북대 명예교수·전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고문) 교수와 그간의 업적을 기리며 추모의 뜻을 전했다. 또한, 단식농성을 벌여온 시군 대표들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한국후계농 “초유의 산불 사태… 정부, 지원책 마련을”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최홍식)는 1일 성명을 통해 최근 영남권과 전북권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정부의 신속한 지원 대책과 조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이번 산불로 인해 농가와 농업 기반 시설이 광범위하게 파괴되었으며, 본격적인 영농준비를 앞둔 농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 연합회의 설명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사망 30명을 포함해 총 75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 면적은 4만8,000ha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농작물과 가축 피해뿐만 아니라 주택, 시설하우스, 축사, 농기계 등 농업 기반시설이 심각한 타격을 입어, 향후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현재 피해가 심각한 8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 지원에 나섰으나, 정치적 혼란과 광범위한 피해로 인해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한국후계농은 “이재민의 생계 안정과 영농 복구를 위해 하루라도 빨리 피해 조사가 이루어지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도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거듭 촉구하며, “대통령이 언제든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1인 통치 국가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국정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대북 도발을 통한 전쟁 가능성까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대한민국은 경제 위기에 봉착하고, 후손들에게 폐허만을 남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민주전북혁신회의는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오직 헌법과 국민의 뜻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다는 여부만을 심판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는 그 경중을 막론하고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기자들과의 질의 응답에서 조지훈 대표는 “우리 시민들, 서민들은 12월 3일 이집의 광범한 일상을 되찾아야 한다. 그래야 먹고살 수 있다”고 했다. 이어서 “만약 파면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일상은 더 큰 혼돈에 빠지고, 전 국민적 항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후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현재 피해가 심각한 8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 지원에 나섰으나, 정치적 혼란과 광범위한 피해로 인해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한국후계농은 “이재민의 생계 안정과 영농 복구를 위해 하루라도 빨리 피해 조사가 이루어지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정 질서 바로잡아야”

도내 정치권, 4일 현재尹 탄핵선고에 “환영” 민주 “윤석열 파면 통해 민주주의 바로세워야” 혁신당 “4일, 나라를 구하는 헌법의 날 돼야”

도내 정치권이 1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4월 4일로 지정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 도당 “현재는 윤석열 파면으로 민주주의 바로 세워야”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이원택)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통해 뒤틀린 헌정 질서를 바로잡고, 무너진 국민의 삶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두래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12·3 계엄 사태 이후 국민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고, 민생 경제가 붕괴됐다”며 “윤석열 정부의 극우적 망상이 만든 위헌·불법적 계엄으로 인해 국적이 추락하고,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김 부대변인은 또 “국민은 이에 침묵하지 않았으며, 거리로 나서 계엄 해제를 이끌어냈다”며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라는 정의로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윤 대통령 탄핵의 주요 사유로 △비상계엄 선포 위헌성 △정치활동 금지 계엄포고령 △국회 봉쇄 및 침탈 △독립기관 탄압 △정지인·법조인 불법 체포 지시 등을 꼽으며, “이 다섯 가지 사유만으로도 파면 사유는 충분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민주당 전북도당은 “2025년 대한민국의 봄은 헌법재판소의 문 앞에 멈춰 있다”며 “4월 4일, 국민이 기다리는 단 한 줄의 주문은 ‘피정규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라’가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면한다’가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도당, “4월 4일, 대한민국을 구하는 헌법의 날이 되어야”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정도상)도 이날 논평을 통해 “늦었지만 마땅한 결정”이라며 “현재는 국민의 명령에 응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수 정책실장은 논평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 계엄령을 모의한 주범이자, 헌정질서를 파괴한 대란의 수괴로 국민 앞에 고발된 상태”라며 “이번 탄핵심판은 단순한 정치적 분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파괴를 용인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역사적 심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실장은 “헌법재판소가 내릴 선고는 단순한 판결이 아니라 헌법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대한 판단이 될 것”이라며 “그 누구도 헌법 위에 존재할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부여한 마지막 신뢰에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선고일까지 전국 시민들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박 실장은 “4월 4일은 대한민국을 구하는 헌법의 날이 되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 그것이 정의이며 민주주의를 위한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